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5차 토론회>

한국민주화운동

-이념적 특성 · 역사적 형성 · 현재적 과제-

발표 : 송 병 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토론 : 정 지 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때 : 2004년 11월 25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이념적 특성 · 역사적 형성 · 현재적 과제

송 병 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문제의 제기

현재 노무현정권 하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 빈부격차의 심화, 지방균형발전의 결여, 주류언론의 담론지배 등이다. 노동진영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개혁이 지체되거나 개혁의 일관성을 국민이 느낄 수 없을 때, 정권의 지지계층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지지철회의 상황은 다시금 정책추진력의 약화를 가져와, 이는 결국 민주화의 지체 내지는 위기로 이어진다¹⁾.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정부에 지지도는 출범 초에 비해 14%나 하락했다.²⁾

반독재민주화가 '성공'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50%를 넘고 다수의 대중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국가보안법으로 아직도 탄압이 지속되고 과거청산이 뼈저거리고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이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상황, 민중생존권이 위협받고 반공주의적 담론이 여전히 지배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대변되지 못하는 체제를 과연 민주화된 체제라 부를 수 있을까? 한국의 민주화는 불철저한 개혁의 과정을 보여줘 왔다. '문민의 정부' 때 IMF처방을 수용했으며, '국민의 정부' 때 '민주주의와 시장의 병행발전', 그리고 이후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노사정위원회도 가동되었으나, 국민 생활의 질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해야 옳다. 즉 국민의 정부 시절 사회보장예산의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한 것이 사실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999),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 발족(2000.7) 등 적극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

1)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이후, 2002.

2) 『한겨레신문』, 2003.5.26, 1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하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빈곤이 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³⁾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도대체 ‘민주화’는 무엇을 위한 민주화란 말인가. 현재 노무현정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확대 등 반노동자적인 정책방향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 많은 대중이 민주화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화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민주화 상황의 문제의 기저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의 한계가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확대이다. 즉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심화로, 실질적 민주화로, 즉 많은 대중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권리를 향유하는 형평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었던가? 한국민주화의 현재를 도래케 한 배경으로서 한국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특성을 규정하고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반공주의적 지배담론의 기원 - 민중적 민주주의의 억압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향의 출발은 자유민주주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권위주의-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마저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정 이래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관념 즉 민중민주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은 철저히 억압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군정 이래 한국의 지배적 민주주의 담론은 자유민주주의였다.

더욱이 그것은 반공주의적 한계에 묶인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지배적 민주주의 담론은 ‘반공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이 이렇게 규정된 배경은 체제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도

3) 이영환,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경제와 사회』 55(2002 가을); 『한겨레신문』 2003.2.16일, “빈곤층 8.9%→12%로 6년새 크게 늘어” 등 여러 기사.

입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위치로 부상하게 된 과정이 냉전적 상황과 남북한 체제대결의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지배적 체제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군정의 냉전적 사고에 의해, 그리고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에 이르는 반공주의적 이념에 의해 강하게 각인저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반도의 이념적 지향은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해방 직후 정치상황은 ‘좌파 해계모니’적인 상황이었다. 한반도는 소련군정의 후견과 결합된 북한내 좌파주도적 상황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등장이 의미하듯, 중도 세력부터 좌파를 아우르는 정치세력의 조직화와 대중적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좌파가 내거는 개혁정책들이 친일청산, 농지개혁 등 당시 시대적 과제로서 아래로부터 분출되던 민중들의 요구와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다.⁴⁾ 1945년 8월은 한국전역에서 철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로 특징지어진다.⁵⁾ 남한의 어떤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인공의 지도자들은 조직, 동원, 민족적 목표의 제시라는 주권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훨씬 앞섰다는 점은 분명하다⁶⁾ 중요한 것은, 해방직후 해방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제반 모순의 해결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⁷⁾를 받았던 이념은 보다 민중적이고 사회개혁적인 민주주의 가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초기적 민주주의 개념은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 즉 ‘인민의 지배’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9월 14일 인공의 선언문을 보면 보다 급진적이고 민중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4) 정해구,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사회문화연구소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2001. 김혜진, “반공불력형성연구”-‘박정희체제의 국가동원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2002 학술진흥재단 지원연구), 3쪽 참조.

5)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역, 청사, 1986, 16쪽.

6)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165쪽.

7) 이 때 민중의 ‘지지’가 이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언표(‘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민중의 ‘지지’란 당시 ‘좌파적’ 이념의 변혁적 내용과, 당시 민중의 주요 요구(친일파청산, 토지문제의 해결 등)와의 ‘친화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제와 그 잔존세력, 반민주적 도당, 반동적 요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외세의 영향도 철저히 척결하고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을 달성하여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⁸⁾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이승만 독재체제가 지속되던 1950년대에도 근본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즉 1950년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시기였다.

“195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과 정신의 면에서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었던 바 한편에서는 전쟁의 완전폐허가 놓은 우울과 음침함, 가공할 반공운동과 위로부터의 동원, 극도의 공중과 피해가 존재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한 사회적 이동과 평등주의의 확산, 대중사회의 도래, 보통선거가 창출하는 엄청난 정치동원과 참여의 폭발이 일어났고 민주주의를 둘러싼 성명전과 공방, 힘겨루기가 불을 뿜었다.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1950년대 한국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반공체제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기실 격심한 내부 변동과 교체, 이동, 유동성을 보여준 시기였다.”⁹⁾

그리고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지향하는 조봉암의 진보당을 위시한 정치세력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역시 강력한 것이었다. 1공화국(1948-1960) 하에서 진보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규합하여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진보적 민족정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¹⁰⁾ 이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어떠한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자수의 30%인 216만 표를 얻은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¹⁾

즉 당시 대중적 요구를 반영한 가치는 보다 민중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이었다고

8)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161쪽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9) 박명립,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76쪽.

10) 권희경,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태양, 1989, 15-97쪽.

11) 전명혁, “한국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의미”, 『기억과 전망』(2004 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23쪽. 그러나 2공화국 내각제 하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는 혁신정당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의원 5명, 참의원 2명만 당선되는 결과를 빚으며 참패했다. 권희경, 앞의 책, 48쪽.

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민주주의 이상과 이를 향한 대중의 지지와 동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이를 지지한 세력과 이와 연관되었다고 의심받은 다수의 민중은 미군정에 의해 철저하게 억압되고 탄압되었다. 반면 국제적 냉전의 도래와 함께 변혁과 혁명을 두려워 한 미군정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반공주의와 반공주의에 채색된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고 강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이후 단정 수립과 분단, 한국전쟁, 독재체제의 강화과정은 민주주의에 관한 두 개념이 서로 투쟁하다가 지배세력의 민주주의개념이 궁극적으로 전일화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배세력의 민주주의 개념은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였다.

이러한 초기의 민중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조되는 새로운 민주주의개념이 미군정에 의해 이식되게 된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은 이른 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였다. 물론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구한말 시대에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¹²⁾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의 체제이념으로 도입된 것은 미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즉 미국을 통해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은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냉전자유주의’, 형식적·절차적 수준으로의 민주주의 개념의 축소, 보통선거제와 의회제를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하는 선거주의, 민주주의개념의 비정치화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¹³⁾ 즉 그것은 냉전의 전개에 따라 왜곡되고 축소된 ‘냉전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는 반공을 전제로 한 기본적 이념과 가치의 합의가 강조되고, ‘사상·이념·언론·집회의 자유’ 등은 반공의 틀 내로 축소되었다.¹⁴⁾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노동문제, 사회문제, ‘사회주의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언론, 집회의 자유는 철저히 탄압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다수

12) 이나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연원과 전개”, 송병헌, 이나미, 김면희,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근간) 참조.

13)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315-316쪽.

14) 박찬표, 같은 책, 316쪽.

결 등 형식적, 절차적 측면만을 중시할 뿐 ‘누가 지배하는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는 이념이었으며, 민주주의를 ‘계급간 갈등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중의 이해가 표현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생활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개념의 탈정치화와 왜곡을 의도한 것이었다.¹⁵⁾

더욱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반공주의였다. 즉 미군정에 의해 이식되었고, 미소대결의 냉전체제 속에서 더욱 강화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상화,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화, 일체의 노동운동 탄압의 정당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반면 사회주의권의 모든 성과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규정되었으며¹⁶⁾ 이러한 반공논리는 국내의 일체의 ‘체제변혁적’ 시도와 운동에 적용되어 탄압의 명분을 구성했다. 이상의 의미에서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지한 것이었다.

이렇게 반공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자유민주주의’는 이후 집권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고 형해화되었다. 즉 1960년대 박정희 독재체제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등치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에 대한 탄압마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곧 미군정에 의해 체제이념으로 이식되고 이승만 정권과 한국전쟁에 의해 보다 강화된 반공규율사회는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변화를 겪는다. 박정희정권은 반공규율사회의 기반 위에서 산업화와 병영화를 통해 사회를 반공병영사회화 하면서 성장주의를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든다. 새롭게 강화된 반공규율사회, 즉 반공병영사회는 적나라한 감시와 폭력,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산업화를 통한 물질적 기반의 확보라는 조건이 결합된 사회를 의미했다.¹⁷⁾ 이러한 상황

15) 박찬표, 같은 책, 312-315쪽.

16) 박찬표, 같은 책, 310-311쪽.

17) 김정훈,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편, 『한국 사회민주주의선언』, 사회와 연대, 2001, 298쪽. ‘반공규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개념은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999.

조희연은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를 반공규율사회 혹은 반공병영사회로 사용하는데, 위의 글에서 김정훈은, 시기를 구분하여 이승만시기를 반공규율사회, 박정희시기를 반공병영사회, 그리고 87년 이후를 반공병영사회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김정훈의 시기구분 및 명칭부여에 공감한다. 김정훈, 앞의 글, 298쪽, 각주 1) 참조.

속에서 이른 바 ‘반공규율사회’가 체계화되면서 진보정치세력은 정치의 주요세력에서 밀려나면서 억압되고 주변화되는 상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제 민주주의의 지배적 개념은 해방정국에서의 민중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냉전적-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게 되었다.

3.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특성 - 반공자유민주주의 극복을 향한 길

일제 시대 좌파탄압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반공주의가 등장한 이래 미군정과 5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주의는 가장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으며, 분단의 고착화와 박정희 독재체제를 거치며 이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반공-개발역사블럭’의 역사적 연속성을 이어주는 핵심요소였다.¹⁸⁾ 사회의 병영화가 해체된다고 해서 반공규율사회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공병영사회기에 접합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는 그것의 물적 토대인 압축성장의 성과에 의해 1987년 이후에는 반공성장주의로 사회를 규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987년 이후의 시기는 시민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해체되면서 보다 세련된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반공규율사회, 즉 반공성장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지만 폭력과 감시보다는 성장주의, 소비주의를 통해 통제가 유지된다.¹⁹⁾

이렇게 지배적 이념이 된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는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공주의와 반미주의는 저항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 목표는 대체로 자유의 회복, 반독재였고, 민중의 생존권, 불평등의 철폐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반공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 즉 1960년대-70년대 반공주의의 제약과 탄압으로 인하여, 그리고 1970년대의 경우는 유신타도가 모

18) 김혜진, 앞의 글, 2쪽 참조.

19) 김정훈, 앞의 글, 298쪽.

물론 1990년대에 들어와 점차 반공규율사회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의 움직임, 과거청산의 노력, 사상의 자유의 상당한 수준의 용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반공규율사회의 강고성을 보여주는 상반되는 사례들도 많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속적 탄압, 이적 표현물 규정의 자의적 적용사례의 지속, 국보법 폐지가 아닌 개정여론의 우세 등은 아직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반공주의의 강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든 것에 우선하는 당면한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양한 편이 아니었고, 1980년대와 같은 이념적 계급적 지향은 약하였다.²⁰⁾ 즉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된’ 지향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²¹⁾,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학원 및 종교의 자유를 쟁취’²²⁾하는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틀 내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9년 3선거헌 반대를 위한 한 선언에는 ‘민주’와 ‘평화적 정권인수’와 함께 ‘승공통일’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들에게서도 반공인식은 투철해 보인다. 1977년 11월 11일 발표된 “현하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근 수년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으로 투옥되어 있는 양심수는, 그들에 대한 적용 범규의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반공인사가 도리어 국가의 보안을 해친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²³⁾

즉 당시 특히 1970대 중반 시기까지 억압적 독재체제에서 민주화운동이 주요하게 요구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복원과 회복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반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이 반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변혁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광주의 비극을 통한 ‘각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 개념의 확대를 향한 시도와 노력도 보여졌다. 당시 노동자 농민 빈민층의 희생을 대가로 한 종속적 착취경제하에서 1970년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하여 광주대단지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의 분노가 연쇄적이고도 대규모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이 민청학련은 ‘민중민족민주선언’에서 ‘기아임금으로 흑사당하는 근로

20) 서중석,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_____,

21) 1970년 4월 8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선언문.

22) 1971년 4월 21일 ‘민주수호청년협의회’ 결성 결의문.

23) 김귀옥,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 반공주의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3년 9월 30일), 85쪽에서 재인용.

대중과 봉건적 착취 아래 신음하는 농민 그리고 또 하나의 격리된 세계에서 확대되어 가는 판자촌 -- 이것이 13년에 걸친 조국근대화의 업적인가?’라고 하면서 ‘민족 자립경제의 확립, 민중의 생활권 보장, 올바른 경제분배질서의 확립과 빈부격차의 해소’ 등을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의 민중지향성을 천명하였다²⁴⁾. 이 선언에서 민중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거나와 말미에는 ‘우리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 집단을 분쇄’하기 위해 꺾기했음을 천명하였다.²⁵⁾ 즉 1975년경을 지나면서 정치적 민주화운동은 생존권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민중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게 되며, 대외종속에 대한 인식도 엇볼 수 있다²⁶⁾. 즉 1970년대 말에 이르면 민주화운동 진영에는 민중, 민족 담론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담론은 내용상으로는 계급적 시각과 민족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각은 반공주의의 극복문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민중적 주체를 통한 변혁 전망과 결합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 1980년대에 한국민주화운동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변혁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한국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이념적으로 일방적 착취와 불평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게 되고,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에 기대어 폭력통치를 자행하는 파시즘적 국가에 맞서 민중민주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는 많은 변혁적 운동집단의 출현을 보게 되며, 노학연대에 기초한 대중운동적 성격이 증가하게 되며, 조직적으로도 체단체가 결합한 연대조직의 형성(국민운동본부 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민주화운동의 지향과 대중성, 조직상에 큰 변화를 보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0년 광주 비극이었다.

“80년 5월 광주는 5공 독재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배의 도덕성을 박탈하고 운동정치의 혁명화·급진화를 촉진하는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기초를 끊임없이 제공했다.”²⁷⁾

24) 이종범, “광주민중항쟁의 배경에 관한 연구” _____.

25) 서중석, 앞의 글.

26)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경제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다.”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

27) 이수인, “1980년대 연합체 조직의 운동정치”, 「한국전쟁 이후 87년 민주화까지 비제도적 운동정치에 관한 연구」 (2002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회 포럼), 83쪽.

당시의 고뇌와 열망을 담은 문건의 하나인 ‘부활의 노래’는 ‘5월 광주’의 의의와 교훈을 이렇게 적고 있다.²⁸⁾

“열사들의 죽음을 뛰어넘는 투쟁으로, 피흘림으로 이루어진 광주 5월 민중항쟁은 민족의 등불이며 민중의 이정표이고 역사의 교과서로서 살아남은 사람과 후세에게 찬란한 교훈을 주었다. 5월광주의 거리, 반민족, 반역사의 무리들에 정면으로 대항해 싸우는 민중들의 아름다운 모습, 공포와 죽음을 뛰어넘은 핏빛거리, 단결하고 연대하고 살을 부비고 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위대한 삶의 공동체, 생명의 존귀함을 지키고자 죽음을 마다않고 일어난 거룩한 시민들, 남녀노소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인간공동체의 참모습...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민족공동체의 참모습,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았다. 미,일 등 외세의 본질을 뼈저리게 느꼈고, 거기에 기생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려는 민족의 이단세력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도히 흘러온 민족사의 진리를 읽을 수 있었다.”

80년의 참담한 ‘좌절’ 속에서 민중운동세력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와 동력, 인식적 기초, 대상과 방법에 대한 반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80년대를 거치며 한국민주화운동은 노학연대를 출발로 한 광범위한 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해갔으며, 민통련, 국민운동본부 등의 통합적 조직체를 건설하였으며, 85년 구로동맹파업, 86년 5.3인천투쟁을 거쳐 87년 6월항쟁에 이르는 대중운동적 가능성을 경험해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0년대를 거치며 한국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개념의 심화와 확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즉 민주화운동은 기존의 지배담론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민중민주주의적 이념으로의 변화를 지향했던 것이다. 물론 1980년대에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지향한 반독재저항세력과 다수의 대중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1980년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다른, 보다 민중민주주의적인 민주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과거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갖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는 향후 민주화운동

28)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윤상원평전』, 풀빛, 1991, 325쪽. 조현연, 「한국 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63-64쪽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의 진로에 따라서는 민중민주주의적 변혁적 길을 향한 조건과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4. 1987년 6월항쟁과 한국의 보수적 민주화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의 ‘성공’으로 인한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민중민주주의적 변혁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 양김의 분열로 인한 단일화의 실패, 이 실패로 인한 ‘유사민주주의’적 노태우정권의 수립, 지역주의의 강화로 인한 지역주의적 정치담론의 부상, 진보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의 실패, 3당합당으로 인한 ‘타협적 민주화’의 전개, DJ의 집권과 노무현정권의 등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기존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 민주화’의 진로를 밟아왔다. 이것이 ‘보수적 민주화’인 이유는 한국 민주화의 현실적 진로가 기존의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수’(즉 수호)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반면 불평등의 악화, 기득권층의 강화, 노동자세력의 파편화 등을 결과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민주화가 이렇게 보수적 경로를 밟게 된 것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일화라는 외적 변수도 있었다. 결국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과정은 기존의 ‘반공역사블록’을 이룬 바 ‘민주화운동블록’²⁹⁾으로 대체시키지 못했다. 즉 지배담론으로서 반공주의와 시장근본주의와 반노동자주의와 보수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반독재)민주화 이후의 보수적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앞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제가 실질적 민주화,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87년 이후 91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지 못하였고, 과거와 같은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폭발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87년의 ‘반독재-직선제개헌’과 같은 공통이슈의 부재, 공통의 ‘적’이 사라진 이후 다수 중간계급의 이탈, 민주화운동진영의 분화와 ‘분열’ 즉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의 분화와 괴리의 증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담론과 시장지상주의의 영향과 이로 인한 이념적 지향의 보수화 및 변혁전망의 상실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복합

29) 정해구, 앞의 글, 10쪽.

적 영향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은 실질적 민주화, 즉 반독재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과제가 더욱 절실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운동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한국민주화현실과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상황이다.

5.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 - 과거청산, 민주화운동, 기억과 기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인가?

① 첫째로, 우리는 앞에서 민주화운동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개념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관건이 되는 것은 반공주의의 극복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과 민간인학살의 주체에 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반공주의의 극복이 과거청산과 민주화의 진전에 얼마나 관건적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보수언론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반공주의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로 한국민주화운동에서 지배담론으로서 반공주의의 영향과 이로 인해 거의 '상수'처럼 존재하는 반공주의적 대중의 존재는 민주화운동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이 반공주의적 성역은 대중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오늘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주화의 진전,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이 반공주의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반공주의는 한국자유민주주의를 일체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금기시하는 식으로 축소시키고 형해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반공주의적 지배담론이 강고한 상황에서, 일체의 반정부저항은 반체제운동으로 따라서 '빨갱이'로 규정하여 탄압했으며, 민주주의를 노동과 사회로 확산하려는 일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의 민중운동을 불온시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노동자간 극단적 힘의 불균형과 사적 소유의 신성화, 그리고 저항적 조직노동자의 무력화와 배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의회 정당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절차적 이념으로 축소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권리확대를 철저히 배제하는 최소주의적 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적 이념은 대중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세력의 지향이념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화운동은 역사바로세우기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폭력에 희생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 과거청산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활용할 필요함으로써 반공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둘째로,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에 관련한 문제이다. 주지하다싶이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의 민주화운동(그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수 없는 것인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반공주의적 족쇄를 극복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③ 셋째로, 비제도적 영역 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연대의 증진은 민주화운동의 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운동의 ‘탈정치화’와 ‘보수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반면 민중진영의 비타협성이 지적된 바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연대의 강화라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작은 차이는 관용하는 정신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운동간의 연대투쟁의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운동의 지점들과 논리를 발견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청산’ 이슈의 현재성을 명확히 부각시켜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하는 예가 그것이다.

④ 넷째로, 향후 민주화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 진보정당의 의회진

출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화운동진영에서 연대하여 단일한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진보정치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든지 연대와 참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⑤ 다섯째로, **과거청산의 현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함으로써**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지속된 사회기득권 구조의 문제, 반공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지속되어 온 국가권력의 폭력성, 일제하 강제동원 등 문제와 현재의 일본 등 군국주의의 문제와의 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거청산과 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 본다. 즉 과거청산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바로세우기, 민간인의 희생과 명예회복, 국가폭력의 문제 등 보다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대중적 호소력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청산은 반공주의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과거청산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여섯째로, 민주화운동의 제도화된 성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념사업회, 보상심의위 등이 관료화에 빠지지 않고 운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도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진영은 이들 제도화된 성과에 참여하고 공동의 연대활동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비제도 영역의 민주화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화된 기구내의 인원들에 의해서도 기울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⑦ 일곱째로, 민주화운동진영은 이른 바 **‘당사자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당사자주의’는 민주화운동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희생된 이들의 성과로서 그 결실과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그 당사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억과 기념이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기념관건립도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과거 많은 열사와 참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져왔다는 것도 망각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미래적 전망과 단절된 채 과거의 것을 회고하고 복원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 그리고 기념관을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의 물적 기반으로 간주하는 경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이 현실

화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이라 본다. 이렇게 되면 기억과 기념의 문제는 흘러간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의미를 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현재의 '실질적 민주화'의 문제와 씨름하는 다수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과 기념은 민주화 진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복고적 유물로 만듦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